

보도일시 (인터넷) 2024. 3. 22.(금) 12:00,
(지면) 2024. 3. 23.(토) 조간

배포 2024. 3. 22.(금) 08:00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 ‘서해수호의 날’ 맞아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등 나서 -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어업 단속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하여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 직종별 보건 안전 관련 규정

담당 부서 <총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정곤 (044-201-8170)
		담당자	사무관	박재현 (044-201-8285)
공동 배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강원진 (044-200-5561)

붙임

공무원 직종별 보건 안전 관련 규정

관련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 어업단속 공무원 적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해양경찰 적용
정부의 책무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u>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u>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u>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u>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기본계획 수립	제46조(재해예방)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u>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u>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u>기본계획</u> 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수립하여야 한다.</u>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u>시행계획을 수립·시행</u>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공표	제46조(재해예방)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u>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u>	제6조(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u>조사를 실시하고</u> , 그 결과를 <u>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위원회 구성	없음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u>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u>
의료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없음	제8조 (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 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u>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u> 제8조의2 (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8조의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u>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u>

※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 제 46조의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